

정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2조 투자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은 향후 5년 간 전반에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로 올해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0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나섰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당장치는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꼽았다.

◇데이터 댐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치를 만들었다.

'데이터 댐'의 개념도 유사하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물론 이를 활용해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디지털 뉴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민 행정안전부 차관, 최기영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디지털 뉴딜 5대 대표과제 및 추진 사업

데이터 댐 - 2021년까지 14만개 공공데이터 전체 신속 개방

지능형 정부 - 공공부문 유선망, 5G 이동통신 무선망 전환

신속한 업무처리·현장중심 행정 지원

스마트 의료 인프라 - 20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 구축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지방 주요간선도에 C-ITS 구축 등

디지털 트윈 - 주요 지역 지형 3차원 구축·영상지도 작성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서비스(AI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는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속도를 낸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 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하여 총 18개 구축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동선분리, 음압장비 등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며, 2020년 3차 추경으로 500개소, 2021년 50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고, 예약제를 적용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된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가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 시설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해이 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고에도 집중한다.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철도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 무선망을 구축한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감측시스템'을 도입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하천의 수해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지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3600km)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으로 국토·도시문제해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 인프라이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지형을 3차원으로 구축하고, 12cm급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 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공동구(120km)에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과금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개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도의회 최영심 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은 15일 전주 서신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전북도청 도로교통과, 전주시 시민교통과,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전북교육청 정책공보관, 전주교육청, 서신초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및 학교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서신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고원식 횡단 보도 설치 등 7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신초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최영심 의원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보다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서신초뿐만 아니라 전북의 모든 학교와 통학로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 관리 강화 통한 국민건강 증진

민주 김수홍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연초일 뿐만 아니라 뿌리·줄기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의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 촉구 결의안'에 이은 두 번째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뿌리,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규제와 세금 등 관리가 각박해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 적용,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와 줄기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는 제조,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흡연역제 및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해 담배의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예방토록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수홍 의원은 "담배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근본적인 흡연률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제대로 된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에 위임

민주 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도입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 고창)은 15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은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

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2,457명인 2011년여 개나 되는 전체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2019년 현재 중앙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3%, 2만5,000여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관 권한이 없어 사업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하면

체육계 폭력 근절... 이용호 의원 '최속헌법' 대표발의

국회 이용호 의원은 체육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방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속헌법'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가 발표한 '2018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대

표 선수와 일반선수 모두 폭력(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의사결정, 방관자적)행위와 성희롱·성추행을 가한 최다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에 최속헌법 선수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면서, "체육계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외의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유호상 기자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위계와 위력을 빌미로 벌어지는 각종 폭력행위와 괴롭힘을 근절하고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는 'one strike-out' 제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